

다산포럼



진진우
언론인·작가

누가 ‘윤석열’을 만들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은 착한 사람이다. 그의 선한 성품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악한 인간은 수시로 낮팠을 바꾼다지만 흔들리는 눈빛마저 감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고위 리더십으로서 선함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악함과 이기심은 단 순히 선함과 자비로움으로 이길 수 없다. 필요하다면 거짓·술수 등을 사용해 신민의 이기심·악행을 다스려야 한다.”

역사적 사실 또한 가법적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이하 윤석열)가 예전에 일갈하기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할 뿐이다”라고 했다. 멋지게 들린 말이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의 이미지는 마침내 그를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끌어올렸다. 윤석열은 내전 김에 공정과 상식, 정의의 아이콘이 되고자 했다. 거기에 반(反) 문재인 깃발만 들어올리면 그만이었다.

물론 15~16세기 중세 유럽 봉건 영주의 리더십과 오늘날의 민주주의 리더십을 통렬에 놓을 수는 없다.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덧붙였다는 정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단 이럴 경우(거짓·술수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 기한은 짧아야 하며 근본적인 덕성으로 회복해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부연한 ‘근본적인 덕성’을 동양적으로 표현한다면 선정(善政)이 될 것이다. 선한 리더십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터이다. 하나 원칙 없는 정치, 질서 없는 민주주의가 파소 독재를 불러왔다는

면 역시 강력한 검사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것일 터인데, 아우리가 사라진 이미지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재인은 애당초 조국과 윤석열을 잘라야 했다. 대단치도 않은 표정장 위조라 해도 도덕성을 앞세웠던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내로남불’이었다면 읍참마속(泣斬馬蹏) 했어야 한다. 아울러 검찰 개혁에 저항했던 윤석열도 함께 잘라야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란 민주적 리더십(하위 가치)보다 검찰 개혁의 시대적 과제(상위 가치)를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앞서야 했다.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란 지나가던 소도 웃을 메시지를 내놓기 전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구했어야 했다. 결국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일등공신은 문재인이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민주주의적 리더십’(대놓고 말하면 우유부단한 리더십)이 초래한 결과면 너무 박한 평가인가.

결론은 국민에, 시민에, 유권자에 달했다는 얘기가. 어떤 정부를 갖고 싶은가. 어떤 공동체의 미래를 갖고 싶은가. 유권자가 선택할 일이다. 부담 또한 유권자 몫이다.

NGO 칼럼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프리랜서는 정말 ‘프리’ 할까요?

2021년 12월 28일,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전남인연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28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MBC 정문 앞에서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사장 면담 등을 통해 사측은 프리랜서 5인에 대한 해고 결정을 철회하고 고용 유지에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광주MBC 뿐만 아니라, 여타 방송국들에서 프리랜서 편법 고용과 쉬운 해고는 현재진행형이다. 광주MBC의 경우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60여 명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송작가, 리포터, 아나운서, 앵커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정기적인 업무와 지속적인 수정, 컷편집 요구와 같은 업무 지시를 받는다. 그럼에도 개편 시즌만 되면 이들은 직원이 아니다. 언제든 지를 수 있는 사람, 프리랜서의 현실이다. 2016년 tvN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피디가 방송 노동 환경의 열악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방송국 비정규직들의 이야기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들은 다르다. 2021년 KBS, MBC, SBS 방송 3사의 사 시사·교양 및 보도 분야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방송작가 두 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고(故) 이재학 피디를 비롯한 청주방송 12명의 프리랜서들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이렇듯 최근의 법적 흐름은 방송국의 고질적인 고용 관행들을 뒤집고 있다.

부동산·지방 소멸, 두 마리 토끼 잡기

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있는 지방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우뚱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자체 또한 각종 지원책과 귀농귀촌 사업 등의 노력으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 소멸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적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젊은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려한다. 이에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SOC를 추가로 확충하여 이들 지역에 주거 편의를 높였으나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블랙홀처럼 더욱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열기를 규제와 공급의 관점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 보자. 조금하게 현상에 너무 몰입하기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해결책을 찾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은퇴자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어촌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에 대한 세제 차원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두 가지 사항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진단한 저널리스트 출신의 수전 레이코비는 그의 저서 ‘반(反)지성주의 시대’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무감각해져 있거나 무지할 경우 잘 작동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는 트럼프 정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국민에, 시민에, 유권자에 달했다는 얘기가. 어떤 정부를 갖고 싶은가. 어떤 공동체의 미래를 갖고 싶은가. 유권자가 선택할 일이다. 부담 또한 유권자 몫이다.

방송사들의 프리랜서 편법 고용과 개별 노동자 대상 법적 다툼이라는 대응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방송사들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감지하고 진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 사회의 실정도 비슷하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청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노동 형태 및 조건 계약 내용 가운데 ‘부당한 수익 배분’이 58.8%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인권 침해나 부당 대우 경험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김’이 75%로 나타났다.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동 인권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임금 노동자에 가까운 워킹형 프리랜서는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적어도 공영 방송사에서 만큼은 이러한 편법 고용을 근절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고용 보험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해고 이후 삶의 안전망을 확충해 줘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2008년 살정전 비과세 대상 주택가액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일반 주택(2억 원)과 한옥 가액(4억 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농어촌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도시(영암·해남, 충남 태안)를 특별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다. 영암·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2005년 개발 지구 지정 이후 17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기지개를 켜는 기업도시에 정부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또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으로의 이전을 위한 작은 유인이 된다면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 열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이전하거나 일정 기간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퇴로를 열어주고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농어촌 인구를 확대해 나간다면 농어촌에 활력이 넘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집값도 잡고 지방 소멸 방지에도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社說

폭증하는 신규 확진자 방역 의식 느슨해졌나

전국적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와는 달리 광주·전남에서는 확산세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요양병원과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하루 200명을 웃도는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6시 현재까지 156명이 신규 확진됐고, 전날에는 133명으로 지난해 1월 26일 112명을 기록한 이래 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하루 평균 15명 안팎의 확진자를 기록했던 전남 지역도 새해 들어 하루 100

명을 넘어서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광주·전남에선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10대 이하의 감염이 확산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감염된 이후 가정이나 부모의 직장 등 지역 사회 연쇄감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복지시설, 제조업체 등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7000명 대까지 치솟았던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3000명대로 완연한 감소 추세다. 방역 당국은 이처럼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른 지역과 달리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치달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특단의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도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는 ‘잠시 멈춤 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차질 없도록

지지부진했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광주공장 부지를 상입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소요될 기간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용도변경이 된다 해도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개발사업 착수 시기는 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하나 걸림돌은 광주시가 아파트 위주 개발에 부진적이어서 조만간 새로운 공장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장부지 매각 및 개발은 간단치 않을 듯하다. 현재 광주공장 부지 매각 및 개발사업 공고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각각 1조 원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이들에게 사업제안서를 변경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당장 공장 이전 및 신축에 투입될 비용만 1조 2000억 원대로,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1조 원대 매각 대금으로는 공장 이전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1조 원 상당

의 부채 만기가 도래해 부지 매각 대금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광주공장 부지를 상입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소요될 기간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용도변경이 된다 해도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개발사업 착수 시기는 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하나 걸림돌은 광주시가 아파트 위주 개발에 부진적이어서 조만간 새로운 공장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장부지 매각 및 개발은 간단치 않을 듯하다. 현재 광주공장 부지 매각 및 개발사업 공고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각각 1조 원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이들에게 사업제안서를 변경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당장 공장 이전 및 신축에 투입될 비용만 1조 2000억 원대로,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1조 원대 매각 대금으로는 공장 이전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1조 원 상당의 부채 만기가 도래해 부지 매각 대금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無等鼓

등식물처럼 책 또한 생명력을 갖는다. 독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은 베스트셀러는 쇠(鎚)를 거듭하며 출판시장에 쏟아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양서라 하더라도 절판(絶版)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발간된 지 오래된 데다 더 이상 출판되지 않은 책들은 자연히 헌책방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수년 전 일본 도쿄 여행길에 ‘헌책방 거리’인 진보초(神保町)를 찾았다. 딱히 특색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성업 중인 헌책방 거리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워낙 지역이 넓고 가게가 많아 헌책방 거리 지도를 따로 쟀었다. 거리를 걷는 동안 마주하는 가게마다 서가에 헌책들이 뿅뿅하게 꽂혀 있었다. 매대에 책들이 뒤얽혀서 쌓여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세태가 변하면서 쇠뿍의 길을 걷고 있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헌책방 거리와 비교됐다.

구례구역 맞은편인 구례읍 신월리 심진강변에는 이색적인 헌책방이 하나 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을 연 ‘심진강책사랑방’이다. 부산광역시 보수동 책방골목에

서 40여 년간 헌책방을 운영했던 ‘책방지기’ 김중훈(70) 대표가 강변 3층 폐도넛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공간을 준비하던 2020년 8월에 1층까지 강물이 밀려들어오는 흉수로 수만 권의 책이 뿔뿔이 되는 수마(水魔)를 겪기도 했다.

열마 전 이곳을 찾아 서기를 둘러본 중 진마(鎚)를 발견했다. 고(故) 한창기(1936-1997) 선생이 신근부정권에 의해 월간 ‘뿌리깊은 나무’가 폐간된 뒤 심혈을 기울여 펴낸 문학지지 ‘한국의 발견’(전 11권) 시리즈였다. 꼭 갖고 싶었던 책인지라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다. 1976년 출간된 문고본 ‘한국고대사론’(이기백 지) 2판 등 몇 권을 추가로 구입했다.

이런 게 헌책방의 묘미가 아닐까 싶다. 뜻하지 않은, 기대 밖의 책을 만나는 행복감 같은 것... 앞으로 심진강변 헌책방이 책을 읽지 않는 IT시대에 출판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당신도 언젠가 줌을 내 심진강물과 지리산 풍경이 어우러진 헌책방을 찾아 ‘나무의 책’을 찾아보시길... /송기웅 문화2부장 song@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인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21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